

미래를 향한 소통

—한국 개념사 방법론을 다시 생각한다—

송승철 | 한림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1. 「동아시아 기본 개념의 상호소통」: 기원과 지향점

본 발제가 한림과학원 주최 학술대회의 기초발제에 해당되는 만큼 「동아시아 기본 개념의 상호소통」 사업의 기원과 목표에 대한 소략한 서술로, 그것도 개인적 소회를 섞어 시작하는 것도 이 학술회의의 지향점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겠다. 2005년 한림과학원 김용구(金容九) 원장이 연구실을 방문하여 ‘개념사’ 기획팀 참여를 권유했을 때 나는 ‘개념사’라는 장르를 처음 들었다. 기획의 목표는 「한국 인문·사회과학 기본 개념의 역사·철학사전」 발간이었다. 요컨대, “19세기 중엽 서구문명과 만난 이후 한국의 인문·사회과학 분야는 혼돈을 거듭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인식도 없이 비학문적인 방법으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고, 따라서 개념사적 방법론은 “잘못된 뿌리를 바로 세우고” 궁극적으로는 “동서양 공간을 넘어 역사에 묻혔던 의미를 찾아 한국 인문·사회과학의 청

* 학술동향에 실리는 두 개의 글은 한림과학원 인문한국사업 〈동아시아 기본 개념의 상호소통사업〉에서 2009년 9월 25일 주최한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 개념의 절합과 횡단〉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사진을 완성” 함으로써 한국의 연구성과를 세계로 알리자는 취지였다. 개념 사적 방법론의 핵심이라고 할 역사적 다양성과 현장성에 대한 존중보다 개념의 시대착오적 오용 쪽에 더 관심이 있었다.

이 기획은 분과학문의 성과 축적에 더하여 학문 간 정밀한 협동작업이 요구되는 지난한 작업인데, 2년 후 ‘인문학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학술진흥재단이 주관한 ‘인문한국 지원사업’ 공모에 지원하면서 그 범위가 동아시아 전체로 확대되었다. 「한국 인문·사회과학 기본 개념의 역사·철학사전」이 무모하게까지 보이는 「동아시아 기본 개념의 상호소통」 사업으로 진화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성공의 가능성보다도 오히려 실패할 확률이 더 높은 현실적 절박함이었다. 오랫동안 동일한 문명권 속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을 누려왔던 동아시아 삼국은 서세동점의 자본주의세계체제에 편입되면서 지난 두 세기 동안 상당한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보여 주었다. 임마누엘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은 자본주의 역시 역사적 제도인 만큼 소멸되기 마련인데, 지금이 그 마지막 단계로 곧 자본주의체제가 다음 단계인 세계체제로 이행될 것이라 주장한다. 나 자신은 이 예측을 묵시론보다 과학으로 받아들이지만, 어쨌거나 국민국가 주권의 절대성은 크게 흔들리는 형국이다. 이제 동아시아 삼국 간 사회경제적 통합성이 강화되는 한편 자본주의세계체제의 하위범주로서의 국민국가 열국체제(inter-state system)의 위세는 약화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런 변화의 와중에 동아시아 삼국은 현재까지 이어지는 갈등과 반목을 걷고 “상생의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 아닌가? 「상호소통」 사업은 이런 절박한 시대적 과제에 대한 응답의 형식이었다.

그런데, 유럽연합에 비결될 ‘동아시아공동체’는 현실성이 부족한 상상인 만큼 지금은 진지한 상호이해를 통해 ‘소통의 기회를 넓혀보자’는 것이 기획 취지였다. 조금 길지만 사업 제안서에서 직접 인용하자.

본 연구소의 <동아시아 기본 개념의 상호소통 사업>은 근대 이후 동아시아 3국의 학문·사회·생활영역에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한 기본 개념들을 대상으로

(1) 이 개념들이 국가·지역·계급·성별·인종 등 분석 단위에 따라 다양하게 수용·번역·변용·정착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2) 이 차이의 분석을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호소통 가능성을 넓힘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의 진정한 상생을 모색하려는 지적 작업이다. 이 작업은 한편으로는 근대의 서세동점의 역사 속에서 근대성을 성취하려 분투했던 (3) 동아시아인들의 노력을 주체적으로 파악하려는 연구이면서, 또한 전 지구화의 물결 속에서 편협한 민족주의를 넘어 탈근대를 달성해야 하는 (4) 동아시아인들의 ‘근대 적응과 근대 극복’의 이중과제를 실천하는 활동이다.¹⁾

그러니까, 이 기획은 성공 여부보다도 지난 200년간 동아시아 근대 형성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개념을 중심으로

- (1) 동아시아인을 주체로 상징하여 개념의 차이를 분석하고,
- (2) 이 차이를 각 집단의 역사적 특이성과 연결하여 소통 가능성을 확대하고²⁾
- (3) 이 과정에서 동아시아인들의 창조적, 주체적 노력을 동아시아인 전체의 근대적 성취로 확산시키되,
- (4) 근대성을 달성하면서도 서구적 근대의 한계를 넘어가는 ‘근대 적응과 근대 극복’의 이중과제를 함께 이루자는 희망의 투사였다. 동아시아의 열린 지식인이라면 「상호소통」 기획 취지의 필요성, 당위성과 긴급성에 찬동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 없다는 옛말은 순환론의 옹호보다는 모든 것은 기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일 터인데 「상호소통」 기획도 이미 존재한 3개의 다른 기획을 참조하여 진화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애초의 「한국 인문·

1) 번호와 밑줄은 이해의 편의를 위해 필자가 임의로 붙였다.

2) 애초 차이를 역사적 차이로 이해하면 소통 가능성이 ‘자동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지금은 차이의 이해가 소통 가능성으로 확대되려면 정치적 의지와 방향이 처음부터 확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마지막으로 지적한 ‘근대 적응과 근대 극복’이 지향점으로 설정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사회과학 기본 개념의 역사·철학사전」 기획은 라인하르트 코젤렉(Reinhart Koselleck)의 『역사의 기본 개념: 독일 정치사회적 언어 사전』(*Geschichtliche Grundbegriffe: Historische Lexikon zur politische-sozialer Sprache in Deutschland*), 룰프 라이하르트가 편집한 『프랑스 정치사회 기본 개념 편람: 1680-1820』(*Handbuch politische-sozialer Grundbegriffe in Frankreich, 1680-1820*) 등 유럽학계의 개념사적 성취에 크게 자극받았다. 동아시아 개념 연구로 확장하게 된 계기는 「유럽사전프로젝트」(European Lexicon Project)의 실현을 촉구한 루시앙 헬셔(Lucian Hölscher)의 글이었다.³⁾ 유럽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공존을 통한 번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경제통합을 넘어 현재 교육과 정치 통합을 지향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통합 과정에서 학문 및 생활세계의 기본 개념에 대한 각국의 의미 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념사 연구자 중심으로 유럽의 실질적 통합을 위해 「유럽사전프로젝트」를 제안한 바 있다. 헬셔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유럽정치사전의 의제를 재론하자면, 이런 기획의 주목적은 유럽 내 여러 국민문화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재현하고 발전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유럽 내의 과거 적대적이었던 정치적 문화적 쟁투를 영구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경험 차이 바로 그것에 토대를 둔 유럽 공통의 미래를 형성하려는 것임에 우리 모두는 동의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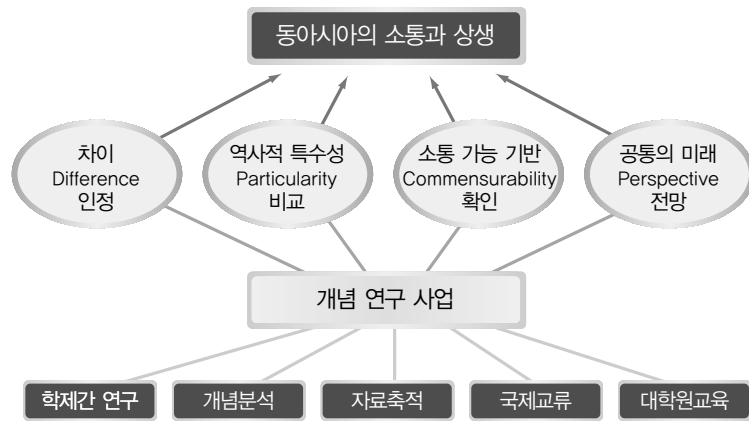
「상호소통」은 지역적 차이를 존중하되 수렴가능한 상생의 공통분모를 모색함으로써 문화적 정체성을 공유하려는 유럽사전프로젝트의 ‘동아시아판’이라 할 것이다.

3) Lucian Hölscher(2003), "The Theory and Method of German 'Begriffsgeschichte' and Its Impact on the Construction of an European Political Lexicon," *History of Concepts Newsletter*, Vol.6, pp.3~7.

그런데, 동아시아는 유럽과 비교할 때, 개념사적 연구성과가 취약하고, 무엇보다 지난 2세기 동안 (유럽 제국주의의 대항자로서) 상호 갈등과 적대적 반목을 겪은 만큼 동아시아적 ‘주변성’을 육화한 접근방식이 필요했다. 「상호소통」 기획팀이 주목한 곳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개념사 연구영역에서 그 나름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칸디도 멘데스 대학(Universidade Candido Mendes) 소속 「리우데자네이루 페스퀴사스 대학연구소」(IUPERJ: Instituto Universitário de Pesquisas do Rio de Janeiro)였다. 페스퀴사스 연구소의 각별함은 주제와 방법론에서 주변성을 전유하는 특유한 방식이었다. 세계체제 주변부에 존재하는 만큼 IUPERJ는 현 단계 역사의 문제화란 점에서 서구학자들보다 오히려 치열한 면이 보였으며, 이는 방법론에서도 반영되고 있었다. 예를 들면, 개념사의 기본전제는 “개념은 늘 논쟁 상태에 있다”는 것이지만, 조아오 페레스 주니오르(João Feres Júnior)는 브라질 하급자들(the subaltern)은 “제도적 담론 과정에 접근이 불가능”하므로 논쟁 밖에 있었던 역사적 경험을 강조하면서 ‘반개념(counterconcept)’의 존재를 강조한다.⁴⁾ IUPERJ는 「상호소통」의 기획자들에게 유럽과 다른 의제 선택과 방법론 개발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상호소통」 기획이 도달한 지점은 「기본 개념」 사업 제안서에서 제시한 다음 도표가 요약적으로 보여 준다. 차이를 인정하면, 그 차이를 역사적 특수성과 연결하면, 이런 연결이 소통 가능 기반을 확인시켜 줄 것이며, 궁극적으로 소통과 상생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다.

4) João Feres Júnior(2005), "For a Critical Conceptual History of Brazil: Receiving *Begriffsgeschichte*," *Contributions*, Vol.1 No.2, p.192. 가야트리 스피박(Gayatri Spivak)의 “하급자는 말할 수 있는가?(Can the Subaltern Speak?)”와 상통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스피박 자신은 이 글에 대해 상당히 유보를 두게 되는데, 이는 ‘반개념’의 개념적 지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함을 말해 준다.



[그림 1] 「동아시아 기본 개념의 상호소통」 기본구상

2. 개념사 연구대상의 조건들: 유럽, 동아시아, 한국

「한국 인문·사회과학 기본 개념의 역사·철학사전」을 시점으로 잡더라도 불과 4년 남짓한 기획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일견 너무 일러 보인다. 「한국개념사총서」 시리즈는 이제 4권까지 출간되었고 올해 몇 권 더 출간 예정이다. 번역총서도 곧 출간되고, 『개념과 소통』도 그 성과는 만만찮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개념사 연구는 발전단계에 있다고 해야겠다. 그러나 기획의 현재 모습에 나 자신 적지 않게 책임이 있는 데다, 돌이켜보면 초기의 무모와 무지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으니 「상호소통」 사업의 미래를 위하여 현 단계에서 비판적 점검이 적실해 보인다.

연구를 시작할 때는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이라는 원대한 목표보다도 이 사업이 가져올 여러 긍정적 기대효과부터 상정했다. 현재적 의미를 과거의 유희 속에 넣어 읽는 시대착오의 교정, 물질/제도적 측면과 행위주체 사이의 일편향 대신 통합적 시각이 가져올 통찰, 한국학계의 고질병인 미국식 실증

주의 편식에 유럽식 학풍이 가져올 균형감각 회복 등이 그중 몇 가지 예이다. 그런데, 이때 고려하지 않은 하나는 개념사 연구 역시 특정한 장르이며, 특정 장르는 특정 대상에 적합성을 가진다는 인식이었다.

예를 들면, 문학비평방법론으로 신비평은 일반적으로 소설보다 시에 적용할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해석 대상인 원자재는 모든 방법론에 자신을 열어주는 무형식과 무의미의 잡동사니가 아니라 스스로 의미 가능성의 폭과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진정한 역사연구는 대상에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미 있는 (객관적) 의미를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추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장르로서의 개념사적 연구를 화려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잠재력은 궁극적으로 원자재 자체의 구조와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

나로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이 두드러져 보인다. (1) 첫째, 연구대상이 세계사의 종합적 측면에서 볼 때 상대적 후진성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 개념사 연구의 주된 대상은 영국의 경우 르네상스 전후의 초기근대이고, 독일학계에서는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중반의 '안장시대'이다. 실제로 16세기 영국은 세계사적으로는 변방이며, 독일 역시 19세기 초까지는 통일국가를 이루지 못한 유럽 내 이류국가였다. (2) 둘째, 안정성과 불안정의 동시성이다. 기본적인 개념사 연구가 적용된 유럽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근대 유럽의 경우, 로마제국 몰락 이후 오랫동안 분권적 봉건제도가 지속되다 베스트팔렌평화 조약 이후 국민국가가 근대적 국가형식으로 등장하게 된다. 다음은 데이비드 헬드(David Held)의 요약이다.

만일 근대국가의 출현을 반드시 (계급으로 분할된 사회경제 구조 및 국제적 국가체제)의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만 한다면, 근대국가가 국가-단위국가 또는 국민국가가 되게 된 근거를 한자리에 모아 보자. 간단히 말해서,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국민국가는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그 결과 그들 주민과 다른 국가들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정통성의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주권을 갖는 국가가 되었다.⁵⁾

틸리(C. Tilly)의 주장을 빌리면 국민국가는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마이클 만(Michael Mann)에 의하면 전비를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최고의 근대국가 형식이 된다. 요컨대, 중심적 제국이 없을 때 각 정치체가 전쟁 속에서 운명이 결정되는 근원적 불안정의 상태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중심적 제국이 부재하기 때문에 비교적 덩치 큰 국가—그러니까 국민국가로 성장하게 되는 국가—들은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게 된다. 이런 불안정성과 안전성의 동거 속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현재 상태의 인식과 미래의 정치체 형식을 두고 갖가지 대안이 개념화된다. 그런데, 이런 안정성과 불안정성의 불안한 동거가 개념적 대안으로 창출되기 위해서는 (3) 셋째, 풍부한 지적 전통이 있어야 했다. 13세기 이후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를 비롯하여 각 국가에서 르네상스를 기점으로 부활한 고전문명을 매개로 여러 개념적 대안이 창출되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 전제하고 질문해 보자. 동아시아 근대의 형성 과정에 이 세 조건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 것이며, 또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궁극적 목표로 설정한 「상호소통」 사업은 장르적 고려를 얼마나 반영하였는가?

먼저 지적해야 할 점은 동아시아 전체의 한계이다. 프랑코 모레티(Franco Moretti)는 소설 형태사 연구에서 초기의 형식적 다양성이 지배적 단일 형식으로 대체되는 과정을 발견하고서 “통합시장에서 후발주자는 선임자의 노선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선임자보다 더 좁은 길로 간다”⁶⁾고 주장한 적이 있다. 이를 오늘날 연구대상인 동아시아 근대에 적용한다면, 압축성장을 한 국가는 모방대상 국가의 모델과 ‘똑같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훨씬 좁은 길

로 간다’는 것이 된다. 동아시아 근대화 모델과 서구 근대화 모델의 가장 큰 차이는 서구의 경우 미래의 모습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안을 놓고 개념 창출이 이루어지는 데 반해 동아시아는 대안이 ‘사실상’ 이미 주어졌다는 점에서 개념사 연구대상으로서의 동아시아는 유럽에 비해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지적해야 할 점은 이 한계 내에서도 연구대상으로서 동아시아 3국의 구매력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다. 세 가지 조건을 고려하고 동아시아를 보면 일본의 근대화가 개념사의 원자재로 가장 유망해 보인다. 18세기 중엽 세계사적으로는 물론 동아시아 질서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후진적 상태였고, 서구 제국주의의 위협을 받는 불안정한 상황이었지만 정치적으로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 결과 일본은 1880년대 전후로 술한 신조어를 만들면서 ‘번역의 근대’를 창출하게 된다. 즉 “타자의 일방적 수용이 아니라, 타자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하는 문화적 실천”⁷⁾의 근대화를 추동하게 된다. 중국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풍부한 문화유산의 종주국임을 주장할 수 있는 데다, 18세기 중엽 이후 열강의 침략에 노정된 후 반식민 상태의 불안정한 국면을 맞지만, 국가 규모와 문화적 역량으로 자율성에 준하는 안정성을 어느 정도 가졌기 때문에 20세기 직전과 직후 상당히 풍부한 개념사적 자료를 제공한다.

그러나 연구대상으로서 한국은 가장 취약한 국가일 것이다. 일단, 세 가지 조건 가운데 가장 작은 문제라고 할 풍부한 지적 전통의 문제만 하더라도 유럽과 비교하면 상황의 차이가 있다. 동양 삼국의 경우 중국 고전문명이 유럽 고전문명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지만, 결정적 차이는 그리스와 로마는 멸망했고 명목상의 적통을 둘러싼 갈등만 있었기에 유럽 내 모든 개별 국가가 고전문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의 국가적 계속성으로 고전문명을 동아시아 전체의 문화적 자산으

5) David Held(1995), “The Development of the Modern State,” Stuart Hall et al, eds, *Modernity: An Introduction to Modern Societies*(Polity), p.84.

6) Franco Moretti(1998), *Atlas of the European Novel: 1800-1900*, Verso, p.191.

7) 임성모, 『번역과 일본의 근대』, 이산, 221쪽.

로 공유하려면 근대적 '민족' 개념과 서구적 정치체의 동아시아적 정착 과정에 대한 광범위한 우회인식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정성과 불안정성의 긴밀한 조응이 없다는 점인데, 「한국개념사총서」의 필자인 박상섭 교수는 이와 관련하여 개념생산의 빈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독립신문』의 필자들(주로 서재필)은 자신들의 정치적 과제로 생각하던 '독립'이 중국중심의 사대질서권으로부터의 탈출을 전제로 나온 것이었던 만큼 보다 절실한 국가의 문제의식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국권의 상실이라는 한층 더 어려운 난국까지 기다려야 했는지도 모른다. 문제는 그러한 국권상실의 위기 상황이 새로운 정치 관념과 국가 개념을 모색하는 중요한 실천적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또한 차용된 이론으로 새로운 개념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도 주어졌지만, 독자적인 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적 전제인 정치적 독립이 곧 사라지게 되었음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⁹⁾

그런데, 오히려 진짜 이유는 박 교수 지적대로 조선은 오랫동안 중앙집권화가 달성되고 정치적 안정을 누렸으며 중국과의 비대칭적 크기로 다른 모델이 나오기 힘든 상황에서 곧바로 자율성이 훼손되는 상황으로 급작스럽게 이동한 때문이 아닐까? 즉, 안정성과 불안정성의 동시성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3. 유럽 개념사의 이월가치와 한계

지금까지 주장한 바를 요약한다면 담론으로서의 개념사 장르의 시각에서

볼 때 동아시아에 대한 개념사적 성찰은 그 나름의 성과야 분명히 있겠지만 세계사적 수준에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고, 그 성과와 한계는 동아시아 삼국 내에서도 편차를 보인다는 점이다. 아마 동아시아 학자들의 개념사 연구의 종착지는 동아시아 근대화가 모방이 아니라 독창성과 특수성을 보이려는 것이겠지만 결과는 어찌면 오히려 서구적 우월성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나타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상호소통」 사업의 원대한 포부는 한낱 꿈일 따름인가?

실은 아직 검토하지 않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작업이 서구 개념사의 모델 아래서 진행된다는 전제이다. 예를 들면 유럽 개념사의 대표적인 코젤렉의 『역사의 기본 개념』은 우리의 전범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번 글을 쓰면서 읽어 본 바로는 그의 역사관이나 방법론에 문제점이 적지 않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예를 들면, 근대는 본질적으로 위기의 시대이며 이 위기의 근원을 계몽주의의 비판적 이성에서 찾는 그의 역사관은 정확한 현실 인식이라기보다 잘못된 결과의 책임을 오히려 진지한, 그러나 자신의 말을 실천하지 못한 자들에게 돌린다는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루이 세바스티앙 메르시에(Louis Sébastien Mercier)가 프랑스 혁명 직전인 1770년에 쓴 미래소설 『2400년(The Year 2400)』이 제시한 미래상에 대해 코젤렉이 설명하는 방식을 보자. 코젤렉은 메르시에의 유토피아가 보여 주는 공화주의적 덕치국가의 모습을 요약하는데, 이때 그가 결론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이 미래상이 보여 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영혼과 이성의 폭력, 즉 모든 폭력을 박멸하는 폭력”이고, “선의를 기초했다는 이유로, 아니 선 자체가 폭력의 사용을 보장”하고 있는 담론 구조이다.

유토피아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면 (메르시에)는 개혁이지만, 그러나 그의 역사철학과 관련해서 보면 후기 계몽주의의 위선에 침윤된 것이다.¹⁰⁾

8) 이 점에서 개념사가 공헌할 영역이기는 하다.

9) 박상섭, 2009, 『국가 · 주권』, 도서출판 소화, 146쪽.

10) Reinhart Koselleck(2002), "The Temporalization of Utopia," *The Practice of Conceptual History: Timing History, Spacing Concepts*, pp.91~93.

마침내 코젤렉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즉, 메르시에 자신은 자신의 비전 속에 감추어진 것을, 그리고 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프랑스) 혁명이 밝혀주게 되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그것은 자신의 고결한 소망 속에 내포된 테러리즘이었으며 작가로서 그가 투사했던 것은 이 테러리즘적 함의의 실현이었다.

유포피아가 보여 주는 명백한 사회적 진보를 당연 평가하면서도, 그 방법론으로서의 급진적 실천을 채택하는 아이러니를 발견하자마자 코젤렉은 역사가로서의 균형감을 잃고 급속하게 후자에 그 이후 사태의 책임을 돌린다. 이는 명백히 ‘관심의 불균형’을 범한 것인데, 코젤렉이 “유포피아는 언제나 그릇된 것이기 마련”이라며 전체주의의 폭력을 한갓 유포피아 장르에 귀책시킨 것도 당연하지 않다.

위 인용문을 읽으면 코젤렉의 역사관에는 니체(F. W. Nietzsche)가 말한 노예의 윤리인 ‘분한(ressentiment)’의 요소가 다분해 보이는데, 코젤렉의 이러한 문제점은 『역사의 기본 개념』의 방법론에도 반영되어 있다. 키스 트라이브(Keith Tribe)의 표현을 빌리면, “구세계의 해체와 신세계의 출현 과정에 대해 역사-개념적 이해”를 시도한 이 사건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역사 내에서 ‘말의 수행성’을 진지하게 고려했다는 점과 함께 기술적으로는 1750~1850년대 안장시대를 중심으로 근대성을 서술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룩한 공적은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나로서는 안장시대의 설정을 통해 근대의 형성을 설명하려는 코젤렉의 시도에 대해 제임스 밴 혼 멜턴(James Van Horn Melton)의 다음과 같은 지적에 주의를 환기할 필요를 느낀다. 멜턴에 따르면 『역사의 기본 개념』은 ‘자유주의에 대한 급진적-보수적 비판’에서 출발했고, 마침내 이 비판을 긍정하면서 끝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1945년 이후 독일 역사학계가 과거의 민족공동체에 대한 주장을 폐기하고 범유럽적 근대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 조금 길지만 멜턴의 말을 직

접 들어보자.

1945년 이후 브룬너(O. Brunner)의 작업을 특징지었던 관점의 변화를 어떻게 해석하든, 그 효과는 자신의 방법론적 통찰들을 국가사회주의와의 끈끈한 관계로부터 유리시킴으로써 살려낸 것이었다. 또는 표현을 달리한다면, 브룬너의 <개념사>는 “탈나치화”되었고(denazified), 명시적인 정치적 기능보다 이제 해석학적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브룬너의 개념사는 전후시대에 살아 남았고 그 생존은 『역사의 기본 개념』 기획에서 가장 두드러져 보인다. 『역사의 기본 개념』의 핵심명제는 이 사건에 대한 브룬너의 공헌을 명백히 보여 주는데, 즉 사회정치적 언어는 1750~1850년 동안 근본적 변화를 겪었다는 것이다. 사건의 명시적 목적은 (코젤렉이 ‘안장시대’라고 부른) 이 전환기 동안 전통 유럽의 구조가 해체되고 근대가 출현한 과정을 기술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이 접근 방식은 브룬너의 초기 모델과 한 가지 점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부합되는데, 그 예외는 역사의 ‘종점(the terminus ad quem)’이 민족공동체가 아니라 단지 근대세계, 즉 브룬너와 콘체가 이제 ‘산업사회’라고 일컫는 것이 된 것이다. 19세기의 자유주의적 질서와 현재 사이의 단절은 이리하여 사라졌는데, 1945년 이후 브룬너의 사유 속에서도 그것은 마찬가지로 사라졌다.¹¹⁾

지금까지 조금 장황하게 말한 바를 요약하자면, 연구방법론과 편집자들의 보수적 역사관으로 『역사의 기본 개념』은 그 학문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개념사의 원래의 목적이라고 할 ‘당대 모순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형식으로는 모자람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안장시대’의 설정도 있지만, 『역사의 기본 개념』의 편집인들—사실은 나아가서 유럽 지식인 대다수, 그리고 더 넓히면 이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한국이나 동아시아

11) James Van Horn Melton(1996), “Otto Brunner and the Ideological origins of Begriffsgeschichte,” Melvin Richter at al, eds, *The Meaning of Historical Terms and Concepts: New Studies on Begriffsgeschichte*(German Historical Institute), p.32.

지식인들 다수—이 지닌 ‘근대’에 대한 “불완전한” 인식도 한몫 단단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국의 개념사의 미래를 놓고 이 문제, 즉 근대성을 논의하자.

4. 동아시아 개념사: ‘연구방법론’을 넘는 ‘이론’의 필요성

오랫동안 서구적 발전 모델에 기초한 근대화론의 인기가 예전에 비해 크게 후퇴했다. 특히 서구 근대의 성취로 생각하였던 보편성과 합리성은 정작 차별과 폭력을 감춘 역사적 이면이 드러남에 따라 서구식 근대는 타기 대상으로 전락한 느낌마저 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지 최근 동아시아인들이 자신들의 근대경험을 평가할 때 과거에 비하면 훨씬 너그러워지고 심지어 선진성의 자신감마저 보인다.

마침 오늘 스즈키 사다미(鈴木貞美) 교수께서 참석하셨으니 선생의 최근 발표(「概念編成史 연구의 의의와 방법」)를 예로 들어보자. 스즈키 교수는 현재의 국면이 “서구 근대의 과학기술에 의한 자연지배 및 인간중심주의를 재고하는 국면”이니 ‘개념편성사’ 연구를 통해 일국주의와 유럽중심주의에서 탈각하는 “근본적 방책”을 모색할 것을 주장하는데 나 자신 여기에 크게 공감하는 바이다. 예를 들면, 스즈키 교수는 일본의 대학제도 또는 ‘일본문학’ 개념의 형성 과정을 살피면서 유럽의 제도를 수용하되 그 형성 과정에서 동아시아의 주자학적 전통이 작용하였고 그 결과 유럽과는 다른 형식으로 발전하면서 독자적 지적 체계와 가치관을 창출한다고 주장한다. ‘문학’이나 ‘예술’도 마찬가지이다. 개념사적 방법론을 정밀하게 적용할 때 이렇게 유럽에서 도입된 개념들이 각국의 역사적 조건 속에서 독자적 모습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추적할 수 있을 것이고, 동시에 동아시아의 근대가 서양의 평면적 모방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창조적 변형으로 정의할 수 있고, 따라서 지금까지 진리로 받아들여졌던 서구 기원의 근대적 개념들을 ‘상대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꼼꼼한 분석에 대해 나 자신은 경의를 표하지만, 다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자. 이런 ‘상대화’는 ‘서구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지만 과연 서구 근대에 대한 진정한 극복에 값하는가? 오히려 동아시아 삼국의 갈등과 반목의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일본성’의 강조로 끝날 가능성은 없는가? 이는 앞서 코젤렉의 『역사의 기본 개념』에 대해 지적한 바로 그 질문에 해당된다. 멜빈 리히터(Melvin Richter)는 『역사의 기본 개념』의 “Herrschaft” 항목을 검토하면서 개념사는 결코 이론의 대체도 대안도 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¹²⁾ 과거를 새롭게 해석한다는 것은 과거의 모순을 극복한 미래 전망과 연결되어야 할 것이며, 그 극복은 바로 과거의 해석 속에서 나와야 하며, 게다가 근대 극복 자체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상 근대적 경험 자체에서 나와야 한다. 즉 탈근대는 근대와 함께 탄생했으며 탄생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진정한 근대 극복은 기존의 개념사 방법론을 통한 ‘상대화’만으로는 역부족이며, 근대의 진정한 성취와 한계를 동시에 관통하는 이론으로 무장할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상호소통」 사업의 과제는 다시 근대성에 대한 논의로 돌아간다. 근대의 위상이 예전에 비해 심히 추락했다는 것은 앞서 말했지만, 최근 서구학계를 보면 과연 그들 스스로가 근대의 성취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 근대는 푸코(M. Foucault)식으로 말한다면 감시체제의 정밀화와 자기훈육의 내면화 과정이요, 들레즈(G. Deleuze)식으로 말하면 탈영토화한 리비도의 흐름을 ‘오이디푸스’를 통해 재영토화하는 과정이 된다. 여기서 나는 두 가지를 주장하려 한다.

첫째는 요즘 학계의 대세랄 수 있는 탈구조주의적 사고는 근대의 이면을 너무 강조한 ‘관심의 불균형’을 범하는 데다가—‘이성’과 ‘이성의 이름을 도

12) Melvin Richter(1995), *The History of Political and Social Concepts: A Critical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p.64.

용한 폭력'을 너무 쉽게 동일시한다—정작 비판 자체도 '근대주의'에 매몰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근대는 하나가 아니라 스페인 중심의 1차 근대와 영국과 독일이 주역으로 활동했던 2차 근대로 나눈 엔리케 두셀(Enrique Dussel)의 견해를 여기서 인용할 필요를 느낀다. 두셀은 폭력은 2차 근대에 해당하는 것이며 1차 근대는 오히려 의미심장한, 그러나 2차 근대의 철학자들이 깡그리 무시한 철학적 성찰을 배태했었다고 주장한다.

16세기의 이론적-철학적 사유는 오늘날에도 적실성이 있는데 왜냐하면 세계체제 성립기간 동안의 원래적 경험의 최초의 표현이자 유일하게 살아남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 이용가능한 “자료”(스콜라-이슬람-기독교-르네상스 철학)들로부터 구할 수 있는 중심적·철학적·윤리적 질문은 다음과 같다. 유럽인들은 최근 발견하고, 근대와 식민화 과정에서 정복된 문화들을 점령, 지배, 경영할 권리를 과연 가지고 있는가? 17세기부터는 2차 근대의 양심(Gewissen)은 이 질문으로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그 답이 사실상 이미 나왔기 때문이었다. (17세기 때, 그리고 18세기부터는 지속적으로) 암스테르담, 런던 및 파리에서 “유럽중심주의”(세계체제 지배의 정당성을 반박의 여지없이 설정하게 될 상위이데올로기)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¹³⁾

두셀이 말하는 16세기 1차 근대는 20세기 후반 유럽 지식인들 의식에서 지워졌는데, 코젤렉의 “안장시대”의 개념도 마찬가지로 이를 피해간다.

또 한 가지는 유럽 근대에 대한 정당한 평가도 필요하지만, 유럽의 근대화 모델을 추종한 동아시아 모델은 유럽이 제공한 모델 중에서 가장 수준이 낮은 부국강병 모델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동아시아가 목격한 근대성은 유럽 근대가 이룩한 전체 수준에서 보면, 예를 들면 계몽주의의 모델보다도 한껏

낮은 차원의 이념이다. 계몽주의 이념형의 한계도 이미 여러 방면에서 지적되기는 하지만, “기술근대”와 “해방근대”가 공동의 적 앞에서 결속을 했던 유럽 근대의 성취는 1815년 이후 150년간 자유주의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도움을 받아 해방근대를 봉쇄하고 기술근대의 진작을 지향하는 지리문화 성립으로 이 성취는 크게 후퇴한 바이다.¹⁴⁾ 그 결과 세계체제에 편입하면서 동양 삼국은 전례 없는 상호적대적 관계로 돌입한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동아시아 근대는 비록 과거보다는 수준이 낮지만 그나마 일정한 성취를 유산으로 가진 19세기 유럽 근대의 미덕—예를 들면, “관용(tolerance)” 따위—마저 제대로 흡입하지 못한 미완의 성취라는 점이다. 동아시아 근대의 독자성을 주장하면서 유럽중심주의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동아시아 근대가 유럽의 진정한 성취를 내면화시키지 못한 ‘짜퉁’ 근대의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한편, 더 나아가 그 진정한 성취는 유럽에서도 후퇴했다는 서구 근대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넘어갈 필요까지 함께 인식하는 일이다. 그런데, 나는 이 길이 개념사 연구의 중심에 백낙청 교수가 지적한바 “근대 적응과 근대 극복”의 이중과제를 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근대 적응과 근대 극복의 이중과제에 대해 언젠가 나는 다음과 같이 쓴 적이 있다.

‘근대 적응 및 극복의 이중과제’는 말 그대로 근대성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향점으로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극복해야 할 한계로 설정하는 이론인데, 그 논지는 세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현 시기는 과거와 다른 면이 많지만 근본적으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근대에 해당된다. 둘째, 자발적으로 근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자본주의세계체제에 강압적으로 편입되면서 근대에 들어선 우리 사회는 아직도 근대적 가치들을 제대로 성취하지 못한 상황

13) Enrique Dussel(1998), “Beyond Eurocentrism,” Fredric Jameson et al, eds, *The Cultures of Globalization*, p.14.

14) Immanuel Wallerstein(2000), “The End of Modernity,” *The Essential Wallerstein*, The New Press, p.458.

이므로 근대적 가치를 계속 추구해야 한다. 셋째, 그런데, 근대성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 근대를 달성 못한 우리 사회로서는 근대성을 추구할 때 탈근대적 자세를 가져야 제대로 된 근대 적용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¹⁵⁾

앞서 개념사의 대상을 규정하는 세 가지 조건을 한국사에 적용하면서 적어도 서구의 연구방법론을 그대로 적용할 때 동아시아 삼국 가운데 한국의 어려운 처지를 피력하였다. 그러나 “근대 적용과 근대 극복의 이중과제”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 근대사 전체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세계체제 반주변부 국가들 가운데 분단체제의 한계 속에서 선거혁명의 방식으로 민주화와 경제화를 동시에 이룩한 거의 유일한 성공사례에 속한다. 실제로 세 가지 조건을 감안하더라도 분단체제의 근원적 불안정 속에 살았지만, 냉전체제 자체는 주변부 국가들에게 가장 안정성이 높은 체제였다. 한국의 민주화가 선거혁명의 평화적 방식이 가능했던 요인 중 하나는 미국이 일정한 한도 내에서 뒷배를 봐 준 점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¹⁶⁾ 여기에 동아시아 및 서구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 대안창출에 필요한 여러 자료를 습득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분단체제의 극복 자체가 민족사적 과제로 떠오르게 된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나는 백낙청을 인용할 필요를 느끼는데, 그는 이 분단체제의 극복이야말로 현행의 근대에 대한 전면적 반성에 기초한 실천이 필요한 일이며 동시에 서구적 근대를 형성한 자본주의세계체제를 흔들 수 있는 작업이라고 지적한다.

분단시대를 사는 우리 한국인의 최대 목표가 분단체제 극복이고 이것은 분

15) 설준규 편, 2004, 『지구화시대의 영문학』, 창비, 246쪽. 이 글은 백영서 편, 2009, 『이중과제론』, 창비에 재수록되어 있다.

16) Bruce Cummings는 오히려 정반대로 한국의 민주화는 미국의 방해를 극복하고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창작과비평』 139(2008, 봄).

단체제보다 나은 체제를 한반도에 건설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 작업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통일국가를 달성함으로써 자본주의세계체제 안에서, 근대 세계 속에서 제 자리를 잡는 그런 작업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까지 이 세계가 작동해오던 방식에 대해서 뭔가 견제를 하고 새로운 것을 내놓는 작업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분단체제 극복이야말로 한반도에서 근대를 달성하면서도 근대 극복을 향해 나아가는, 근대 극복의 실마리를 여는 이중적인 작업이랄 수 있지요.¹⁷⁾

5. ‘리얼리즘’ 개념의 예: 「상호소통」 사업과 동아시아 개념사의 미래

「상호소통」은 10년 동안 60여 개 이상의 기본 개념에 대하여 모노그래프 분량의 개념사총서를 출간할 예정인데, 목록에 있는 연구 제목은 대개 근대 정치사회의 핵심 개념들이다. 개인적 의견을 말한다면 해방 이후 분단체제 하에서 민주화를 지향한 실천 과정에서 ‘민족’, ‘민중·대중’, ‘국가’, ‘통일’, ‘개혁·혁명’, ‘보수’, ‘주체’, ‘민주’ 등은 나 자신 과묵한 탓이었지만 서구이든 동아시아이든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방식으로 의미론적 확대를 보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치적·이념적 대안의 역할을 해왔다. 정치사회적 용어만이 아니다. 나 자신이 공부하는 문학영역에서만 하더라도 ‘리얼리즘’ 같은 개념의 의미확대와 적용방식의 변화는 역시 과묵한 탓이었지만 세계사적 논의 수준에서도 놀라운 창조성을 보여 준다.

‘realism’은 철학에서는 유명론에 대척하는 실재론으로, 문학에서는 사실주의 또는 현실주의로 번역하거나 리얼리즘이란 외래어 표기를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 출간된 사전을 보면 대개 ‘사실주의’로 옮기고 있고, 1990년대 이

17) 백낙청 외, 1998, 「백낙청 편집인에게 묻는다」, 『창작과비평』 99, 23쪽.

후에 출간된 사전들은 '리얼리즘'과 '사실주의'를 병기하고 있다. 리얼리즘의 번역이 어려운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realism'을 파생시킨 원래의 단어인 'real' 또는 'reality' 자체가 '가시적으로 존재하는'의 의미와 '표상을 넘어서는'이란 상충되는 두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 하나는 'realism'이 기술적 측면과 기율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는 재현기법으로 당대의 사건을 있는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이며, 이에 반해 사건의 진짜 모습을 '실답게' 그리려는 것은 일종의 창작윤리나 기율이며 후자를 지칭한다. 여기서 서구 리얼리즘 논쟁사를 아주 범박하게 요약한다면, 이 두 겹의 의미의 혼란으로 술한 오해와 왜곡을 불러일으키는데, 현대로 올수록 리얼리즘을 작품의 진정성을 심문하는 비평용어보다도 과거의 특정한 기법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증가한다. 특히, 재현 가능성 자체를 비판하는 탈근대주의 이론에 오면 리얼리즘은 '뾰진성'을 강조함으로써 텍스트 자체가 생산된 것임을 은폐하는 이데올로기적 실천으로 폄하된다.

'realism'은 1920년대 후반 한국문단에 도입되는데 '현실주의', '자연주의', '리얼리즘(내추럴리즘)' 등 초기 프로문학 시대부터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이 거의 모두 사용된다. 그러나 '사실주의'이든 '리얼리즘'이든 당시 프로문학 비평가들은 이를 '낭만주의'와 대척적 의미로 사용하는 경향을 보여 주는데, 이때는 주로 현실의 일상적·객관적 묘사라는 기술적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정작 세계관이 문제되는 경우는 '재래의 사실주의'·'파행적 사실주의'·'변증(법)적 사실주의'·'사회적 사실주의'·'사회주의 사실주의'처럼 형용사를 붙여서 표현했는데, 이 경우 내용과 형식이 각각 수식형용사와 명사로 분리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런 이분법은 1920년대 말에 오면 프로문학 비평가들도 완전히 의식하게 된다. 흥미 있는 것은 서구 비평가들로부터 교조적 리얼리즘으로, 정치에 대한 문학의 굴욕으로 두고두고 비판받게 되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상당수 프로문학 비평가들이 최고의 리얼리즘으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일부 필자들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를 의도적으로 자신의 목

적을 위해 원의를 왜곡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의미 있는 작업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예를 들면, 임화는 '자연주의'와 '사실주의'를 구분하는 지점까지 나가는데, 이는 리얼리즘이라 기술하든 사실주의라 기술하든 이를 형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경향에 대한 실천적 극복이다.

식민지시대 말에 숨을 죽였다 해방 이후 고개를 든 리얼리즘론은 1970년대 민족문화론과 더불어 화려하게 부활한다. 이후 과거와 달리, 서구에서 진행된 논의가 우리 리얼리즘론에 깊숙이 들어오면서 술한 논쟁이 진행되는 데, 이때 리얼리즘은 사실주의적 기법이 아니라 "참다운 자기실현 및 인류의 집단적 자기해방의 역사적 과제를 지향"하는 새로운 의미도 얻게 된다. 1970년대 이후 리얼리즘 논의에서 새로운 것은 의미론적 차원만이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은 리얼리즘 개념의 용어분화에 커다란 진전이 일어난 일이다. 리얼리즘을 '당대의 일상적 사건의 객관적 묘사'를 의미할 때는 '사실주의'로 표기하고, '현실의 참다운 모습과 움직임'을 담는 기율이나 윤리를 말할 때는 '리얼리즘'으로 표기된다. 동시에 루카치(G. Lukács)의 이론적 영향 속에서 발자크(Balzac)의 리얼리즘과 졸라(E. Zola)의 자연주의를 변별하는 이론이 수용된 것도 문학용어 사용 관행의 진전에 해당한다. 한편, 1980년대 오면 기법적 측면은 '사실주의', 기율적 측면은 '현실주의'로 분화되기 시작한다. 그런가 하면 현실주의적 기율이 사실주의적 현실과 분리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강조하는 필자들은 '리얼리즘' 표기를 고집하기도 한다. 어쨌든 '리얼리즘', '사실주의', '현실주의'의 번역어의 선택을 통해 리얼리즘 개념의 의미 충위를 구분하는 것은 세계 리얼리즘 개념사에서 큰 진전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1990년대가 오면 안타깝게도 이전의 진전에서 다시 후퇴해서 현실주의는 거의 쓰이지 않고 탈구조주의 비평의 리얼리즘 폄하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아 다시 '사실주의 대 리얼리즘'의 이분법으로 돌아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상호소통」 사업은 개념 연구가 동아시아공동체에 직접 공헌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개념 형성 및 변용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대응이 동아시아 전체의 상생을 지향하는 창조성을 보일 때, 이 대응을 동아시아인 모두의 지적 자산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상호이해와 소통의 가능성을 열어 나간다.

실제로 근대문학의 가장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인 ‘리얼리즘’의 경우, 해방 후 분단체제 극복 과정이 한국 개념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된다는 나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작은 증거이다. 또, 나 자신은 이렇게 새롭게 개진된 리얼리즘의 의미 속에 동아시아공동체의 미래를 키워나갈 연대를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